

제20대 대선 후보 정책 질의서

병역 제도 개편에 대한 입장을 묻습니다

한국은 국민 개병제를 원칙으로 한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2022년까지 상비 병력을 50만 명으로 감축하는 등 숙련 간부 중심으로 군 인력 구조 개편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한국군은 여전히 병력 위주의 대군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현재의 병력 규모와 18개월의 군 복무기간은 앞으로 유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2025년부터는 입영 대상자 수가 필요한 병력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징집률 80%를 가정했을 때 2040년 이후 연간 현역병 입대 가능 인원은 10만 명 수준입니다. 이에 어떤 방식으로든 병역 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군의 '적정 병력'이 어느 정도인지 결정하고 병역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차기 정부의 핵심적인 과제일 것입니다.

군인권센터, 나라살림연구소,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10일 [<평화와 인권의 관점에서 본 병역 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하고, ▷상비 병력 30만으로 감군 ▷30만 병력에 맞춰 병 중심에서 간부 중심으로 병력 구성 개편 ▷부대 구조 축소 개편 ▷의무병 복무기간 12개월로 단축 ▷병 월급 최저임금 수준으로 현실화 ▷3년 복무 지원병 제도 신설하여 징모 혼합제 도입 ▷부사관과 장교 인력 획득 구조 개편 ▷여군 지원병제 운용 및 여군 확대 ▷장기 복무 인력 확보를 위한 다각적 변화 ▷군 복무환경 개선과 군 인권 보장 등의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위 제안을 바탕으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게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2022년 1월 14일(금)**까지 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여부와 내용은 취합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 한국군의 적정 병력 규모

1. 한국군의 상비 병력은 2022년 기준 50만 명입니다. 현재 한국군의 병력 규모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적정하다
 - 적정하지 않다**
 - 기타 의견 :

2. 1990년대부터 다수의 연구 결과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된 평화 공존의 상황에서 한국군 적정 병력의 규모를 약 30만 명으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징병제 국가 병력 규모의 평균 수치를 한국군에 대입하면 평균으로 40만 명, 중위수로 25만 명 정도로 추산되기도 합니다. 육군본부 역시 <육군 비전 2050>에서 2050년 가능한 상비 병력 규모를 30~35만 명으로 추산하였습니다. 한국군 병력을 3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한국군의 적정 병력 규모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한다**
 - 동의하지 않는다
 - 기타 의견 :

3. 한국군이 대규모 병력과 사단을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유사 시 북한 안정화 작전' 때문입니다. 유사 시 북한 지역을 점령한다는 계획으로, 국제법적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많을 뿐 아니라 비현실적인 계획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에 군의 목표를 북한 공격이나 점령이 아닌 '방어'로 분명히 정립하고 이에 따라 군사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유사 시 북한 안정화 작전 계획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유사시 안정화 작전이란 결국 체제 붕괴와 흡수통일을 목적으로 한다는 상대의 반발을 낳을 뿐입니다. 전쟁방지 목적에 최우선을 두고 '방어충분성'에 입각한 30만 명 규모로 감축해야 합니다. 과학화·현대화·지능화된 30만 명의 정예강군은

한반도 평화를 충분히 수호할 수 있습니다.

4. 상비 병력 규모 감축에 따라 예비군 규모도 감축해야 한다는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여부와 함께 예비군 적정 병력 규모와 예비군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현재 2백만 명이 넘는 의무 예비군제도를 폐지하고 50만 명 규모의 직업 예비군제도로 전환(11월 15일 발표 '한국형 모병제' 공약 중 셋째)

■ 병력 구성과 병역 형태

1. 한국군의 장성수와 장교수가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동의한다**
- 동의하지 않는다
- 기타 의견 :

2. 병역 제도 개편 시 장교 / 부사관 / 병의 인원과 비율은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한국형 모병제' 공약 : 장교와 부사관은 현재와 비슷한 15만 명, 병사는 일반 징집병과 전문병사를 합쳐서 15만 명

3. 병역 제도 개편 시 육군 / 해군 / 공군의 인원과 비율은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한국형 모병제' 공약 : 육군은 15만 명으로 현재의 절반 수준. 해군(해병대)/공군은 현재 수준과 같은 15만 명

4. 병역 제도 개편 시 병역 형태(의무병, 지원병)은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한국형 모병제' 공약 : 1단계-징·모 혼합제 : 의무복무 12개월

징집병 + 의무복무 4년 전문병사 혼합운용 → 2단계(2030년대) : 전원 모병제(징집 소멸)

5. 전면 모병제 혹은 징모 혼합제를 도입할 경우, 지원병 모병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병사를 모집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답변) 모병하는 지원병의 처우에 대한 확실한 비전 제시(전문병사는 초봉 300만원 수준의 급여 보장, 4년 복무 후 부사관 진입 시 대학(원) 진학 지원, 10년 이상 장기 복무 후 전역 후 관련 일자리 준비 등)와 함께, 군대와 군 복무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후자 중 군 복무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직업 군인을 포함한 군인에 대한 처우 개선, 둘째, '군복을 입은 시민'으로서 군인 인권 개선(성폭력 등 위계에 의한 폭력과 그 은폐·왜곡 등 구태 문화의 청산-평시 군사법원 폐지, 1·2차 가해자에 대한 단호한 처벌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국 군대가 명분 없는 전쟁에 참전하는 등 군대와 군 복무에 대한 회의가 커질 경우 모병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군에 대한 자긍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불행한 역사를 절대 되풀이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평화 수호 군대로서 확실한 자리매김이 필요할 것입니다.

6. 육사, 해사, 공사, 3사를 통합한 통합사관학교를 운영하여 장교 선발 구조를 단순화하고, 장교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장교 선발 구조를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기타 의견 :

7. 의무병 복무기간을 12개월로 단축하자는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적절한 군 복무기간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동의합니다. '한국형 모병제' 공약- 1단계 징·모 혼합제에서 의무복무 징집병의 복무기간을 12개월로 제시

■ 부대 구조 개편

1. 병역 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부대 구조 개편도 필수적입니다. 현재 <국방개혁 2.0>에 따라 육군 8 → 6개 군단, 39 → 33개 사단으로 줄이고 있으나 이는 2005년 <국방개혁 2020>의 6개 군단, 20개 사단으로 감축 안보다도 후퇴한 계획입니다. 27개의 국직부대를 10개 안팎으로 통폐합하겠다는 계획 역시 거의 진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병역 제도 개편 시 부대 구조를 어떻게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할 것입니다.

첫째, 기존 병력중심의 선(line) 방어개념을 현대전 방식으로 전환

- 전투지역전단(FEBA) 방어개념에 집착할 경우, 전쟁 초기 병력 손실을 급증 불가피
- 전방경계 과학화를 통한 전방 상시 경계 병력 최소화로 대규모 병력 손실 예방 및 장비 중심의 효율적인 방어작전 수행

둘째, 합동·국직부대 및 각 군 본부의 비효율적 부대 해체 및 유사·공통 기능 수행부대 통폐합

- 육군 항공작전사령부/인사사령부, 국군수송사령부, 지휘통신사령부 등 일부 부대 해체
- 육군 미사일사령부와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등 유사 기능 수행부대 통합 추진

■ 군 복무환경 개선

1. 의무병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한다

- 동의하지 않는다
- 기타 의견 :

2. 임금 인상 외 군 복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방안은 무엇입니까?

답변) - '군 장병이 행복한 병영' 공약 중 병사 처우 개선과 기본권 신장 등 관련 다음과 같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군인에 대한 국가의 책임 분명히 선언 : 병사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보장, 공무상 상해에 대한 치료와 회복 국가가 책임 등.

둘째, 병사의 기본권 확대 : 경계근무, 훈련 및 교육시간을 제외한 휴대전화 전면 자유화. 둘째, 두발·복장 등 병사와 간부의 차별 해소.

셋째, 1일 급식비 50% 인상, 전 병영 침대형 6인 1실, 1일 7시간 근무 및 일과 후 사생활 보장 등 사기-복지-오락의 균형 등

3. 향후 평시 군 사법 체계의 완전한 민간 이관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한다
- 동의하지 않는다
- 기타 의견 :

4. 최근 도입된 군인권보호관에게 불시 부대 방문 조사권, 자료 제출 요구권 등의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군인권보호관을 전담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증원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한다
- 동의하지 않는다
- 기타 의견 :

5. 군대 내 성폭력과 인권 침해 등으로 인한 사망과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희생이 반복되는 동안 군은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기에 급급했고, 군의 특수성이라는 이유로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거부해왔습니다. 군 인권을 증진하고 군대 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답변) 무엇보다 군의 특수성을 내세워 군 지휘관의 자의적 사법통제를

보장하는 군사법원을 평시에는 폐지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군 내 성폭력 발생 시 One-Out 제도 의무적 시행 및 성범죄 예방제도 강화(신고 접수 시 군사경찰이 무조건 출동하도록 법제화 해 신속한 초동수사로 범죄에 대한 은폐 및 축소를 막고 2차 가해 등 추가 성폭력 예방 등), 성폭력 및 성희롱 근절을 위한 전문 인력 확충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6. 2021년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으로 국민적 공분이 있었고 각종 제도가 보강되거나 법률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제도가 미비한 문제보다는 제도 운영 상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젠더 감수성이 부족한 군 조직 문화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군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군을 감시하기 위한 제도를 갖추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2차 가해도 성범죄에 준하여 처벌하기 위한 국방부 성폭력전담기구 설치와 관련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답변) 동의합니다. 더불어서 성폭력 상담창구 활성화를 위해 현재 인원과 권한이 크게 제한된 성고충전문상담관의 인력 확충, 군인권보호관의 권한 강화 등 군 외부의 감시기능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7. 군인의 직업 안정성 강화를 위하여 모든 간부에게 근속 20년을 보장하되, 군인 연금의 수령 개시 시기를 현행 전역 이후에서 정년 이후로 변경하자는 제안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답변) 군인에게 근속 20년은 군인 연금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기준점입니다. 현재 연령 정년이 대위는 43세, 소령은 45세, 중령은 53세, 중사는 45세, 상사는 53세 등으로 일부 대위 및 소령, 중사로 전역하는 사람들이 근속 20년을 못 채우는 경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속 20년을 채워 군인 연금을 받기 위해 일부 대위 예편자들이 부사관으로 다시 복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인사적체 완화와 군인 처우 개선 명목으로 2~3년씩 연령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이미 군인 연금 기금이 고갈되어 1년 국가보조금만 1조원이 훨씬 넘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에 대한

국민의 곱지 않은 시선, 재정당국의 반대 등으로 흐지부지된 바 있습니다.

근속 20년 보장 대신 정년 이후 군인연금 지급 안은 직업 군인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다른 연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을 때 나름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근속 20년을 채우고 군에서 예편한 대다수 군 간부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급별 연령정년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영포대(소령 진급 포기 대위), 중포소(중령 진급 포기 소령) 등을 낳을 가능성이 있고, 결국 군 조직 자체의 활력과 효율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논리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무능한 자들을 위해 대다수 군 간부가 희생해야 하느냐'는 분열의 논리가 횡행할 수도 있습니다.

군인연금의 지급을 다른 공무원이나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65세 정년으로 통일성을 기하자는 연금개혁의 대원칙을 갖고서 전역을 앞둔 군인에 대한 직업 훈련 강화, 전직 지원 등의 대안을 가지고 설득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장단점과 대안에 대해 숙의를 통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여군 확대

1. 국방부는 2022년까지 여군 비율을 현 간부 인원 대비 8.8%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여군 비율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여군은 그 숫자와 비율이 2020년 말 현재, 간부 중에서 7.4%, 전체 병력 중 2.4%에 불과합니다. 2022년까지 8.8%로 늘린다고 하지만, 여전히 크게 부족합니다. 그에 비해 여군 간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크게 늘었고, 경쟁률도 매우 높습니다. 최근 임관한 육군 신임 하사의 82.5%가 여군이었는데, 여군 부사관의 경쟁률이 7:1 이상이었습니다. 군인을 직업으로 택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장교, 부사관 등 간부 중 비율을 크게 높이는 것과 더불어 전문병사 제도 도입 등으로 직업 여군의 전체 인원을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 여군 복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답변) 국가인권위원회 군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영역별 여군 차별 경험 중 1위는 보직 및 직위 관련 문제로 2012년 21.8%에서 2019년 24.6%로 오히려 그 비중이 더 커졌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별 개선이 없거나 악화되어 많은 사람이 그 문제를 더 크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여군 인사 제한 규정을 재정립해 여군 보직 및 경력 관리의 유리천장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여군 최초로 보병 병과에서도 소장이 탄생해 화제가 되었습니다만, 계급 및 병과, 보직 등에서 여군이라고 해서 어떤 제한을 두거나 생각하게 하는 유리천장 자체를 없애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소수라는 이유만으로 화장실 등 기본적 편의시설마저 크게 부족하거나 개선을 요구하기 어려운 처지입니다. 더불어 출산, 육아 등 워킹맘으로서 겪는 고충이 다른 직장과 마찬가지로 심한데도 보육 등의 환경은 크게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대우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 군인이 누리는 권리, 민간인이 누리는 권리만큼은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목소리에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 병역 제도 개편의 정책적 실현 방안

1. 병역제도 개편은 국방, 외교, 경제, 젠더, 청년 등 다양한 층위의 정책적 문제가 범사회적으로 맞닿아 있는 이슈이며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어야 할 국정 과제이기도 합니다. 집권 후 숙의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유관 부처, 시민사회, 전문가 등을 망라한 '병역 제도 개편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가칭)'를 구성하자는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사회적 협의체 등 시민사회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갈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30만 명 규모로의 병력 축소, 대폭적인 모병제 요소의 도입 등 병역제도 개편의 경우, 군 고위 간부나 경제 부처 등 유관 부처의 관료적 이해에 따른 저항 등에 휘둘러서는 개혁이 크게 후퇴하거나

지체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의견은 수렴하되 꼭 필요한 개혁인 병역제도 개편 등이 왜곡, 지체되지 않도록 강력한 의지를 갖고 개혁 성공을 이뤄내겠습니다.

2. 병역 제도 개편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차기 정부가 빠르게 개편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제시하고 있는 병역 제도 개편 관련 공약의 임기 내 실제 이행을 위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답변) 육해공군 등 각 군의 처지와 실정에 맞게 모병제 도입, 정착 등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단계 징·모 혼합제, 2단계 완전 모병제를 실시하되, 1단계도 각 군별로 탄력적으로 적용하겠습니다. 현재도 지원병으로 운영되는 해군(해병대)과 공군은 2025년까지 새로운 제도로 선 전환하고, 부대 구조 전환에 상대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육군은 2029년까지 후 전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단계적, 각 군별 탄력적 적용의 기본안에 대해 임기 첫해에 큰 틀의 합의를 이뤄내고, 예산 확보 및 제도 전환을 위한 각종 법률 개정 및 기구(인원) 정비 등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기타

1. 위의 질의에서 다루진 내용 외에 후보자가 구상하는 병역 제도 개편 방안의 구체적인 방향이나 정책, 시기가 있다면 추가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현재의 50만 명 규모의 대병력과 경직된 징집병 제도는 인구절벽이라는 상황에도 부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평화프로세스'라는 비핵화와 평화의 항구화를 위한 구상, 계획과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또한, 양극화가 심화된 세상에서 남성 청년에게 부담이 되는 병역제도가 아니라 군 복무를 통해 더 큰 기회를 얻고 싶은 남녀 청년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병역제도로의 개편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보를 지키는 데서 나아가 평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국가 전략과 어울리는 국방정책, 병력과 장비의 수량 위주의 군대에서 급격한

기술전환의 시대에 부응하는 현대화, 과학화, 지능화된 군대로의 전환, 독재시대의 유산을 청산하지 못한 비인권 군대에서 군복을 입은 시민의 권리가 보장되는 인권 군대로 전환하기 위한 강력한 국방개혁이 결합되었을 때 병역제도 개편은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병역제도 개편이 그런 노력의 일환이자 촉매제로서 기능할 것이기에 그 의의에 대한 우리 정치권과 사회의 인식이 제고되고 개혁 성사를 위한 노력이 모아지길 기대합니다.